

건설업계 종합평가낙찰제 부작용에 신음

종합평가낙찰제 시행이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난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기존 최저낙찰제의 등급공사가 종평제로 변경되며 오히려 수주물량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종평제 공사 대부분이 지자체 수요로 지역업체들은 수주 증가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수주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최저가낙찰제의 '등급별 유지격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누고 입찰공고 시 추정금

지자체 공사 입찰 더 어려워져 수주절벽 중소기업 생존 위협

정부 낙찰률 인하 개정안 예고 업계 "과거 부실시공 초래" 반발

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참여를 유도했었다. 건설사별 규모를 나눠 중소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종평제는 사전심사(PQ)를

하지 않는 지방계약법에 의거해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등급공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최근 정부가 종평제 낙찰률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종평제 시행 결과 평균 낙찰률은 87.0%로 종합심사 낙찰제보다 6.5% 높았다. 2015년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74.9%)보다는 12.1%포인트나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낙찰률이 높으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이 되기 때

문에 낙찰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인위적인 낙찰률 조정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부실·적자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최저가낙찰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평제의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자체가 처음부터 예정가격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공사 참여도 제한되고 있어 등급공사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액 165조원 토목 16% 줄고, 건축은 12% 늘어

건협, 수주동향조사 결과

주택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보다 4.4% 늘어난 165조원을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수주 누계액이 164조87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5년 158조원보다 4.4%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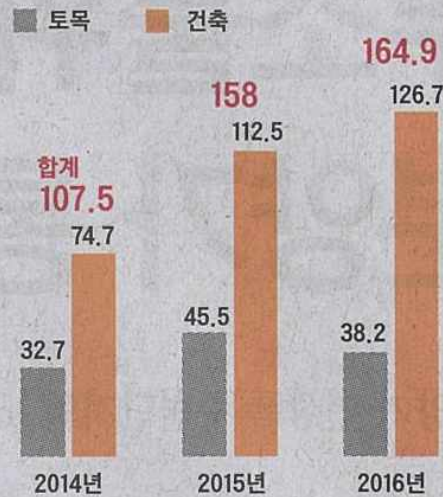
공종별로는 토목분야가 38조1959억원으로 전년보다 16% 줄었고 건축분야는 126조6798억원으로 12.6% 늘었다. 발주자로 보면 공공(47조4000억원)과 민간(117조5000억원) 모두 소폭 증가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조감도)' 신축공사를 2조5604억원에 수주하는 등 민간건축이 수주 증가를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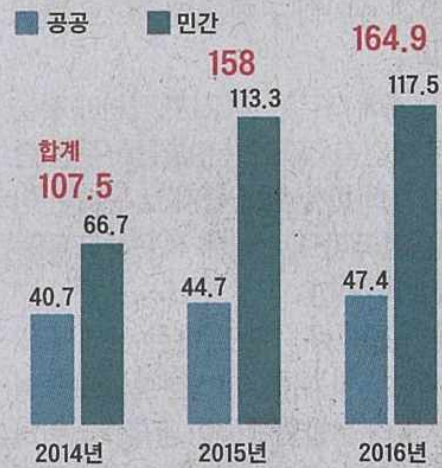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건설공사 수주액은 8조633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6% 증가했다.

공공부문에선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3-2공구 노반신설,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13공구 건설공사 등 토목(19.2%)과 화성동탄2 A83 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2-1M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등 건축(27.7%)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 민간부문은 토목(-66.0%)이 급감한 반

최근3년간 공종별 누계실적 (단위:조원)



최근3년간 발주자별 누계실적 (단위:조원)



면 건축(95.4%)이 크게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체 수주액은 많이 늘었지만 굵직한 대형사업 위주여서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